

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64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4. 8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신영대 · 이원택
이성윤 · 조계원 · 박희승
김교홍 · 김한규 · 민병덕
강준현 · 김태년 · 박민규
김우영 · 김태선 · 허종식
문대림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을 통하여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의료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첨단의료복합단지 내의 관련 기관간의 상호 연계와 협력도 중요하지만, 산업단지, 경제자유구역, 연구개발특구, 산업기술단지 등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정·운영 중인 다른 단지·특구 등과의 연계·협력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또한,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시 해당 입지의 규모, 특성,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조성·육성 방식 또는 집약적 조성·육성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고,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또한 고려하도록 함

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발전과 첨단의료복합단지 간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다른 단지·특구 등의 연계·협력을 촉진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,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시 해당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조성·육성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,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조의2, 제5조제1항 후단 및 제5조의2 신설 등).

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령을 적용한다.

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발전과 첨단의료복합단지(제5조제1항에 따른 단지등을 포함한다) 간의 연계·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.

이 경우 입지 선정은 그 규모, 특성, 지역 등을 고려하여 넓은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·육성하는 방식 또는 좁은 지역에 집약적으로 조성·육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한 입지 선정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

조제1항 후단에 따라 좁은 지역에 집약적으로 조성·육성하는 방식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지 선정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입지 선정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1조의2(부지등의 처분 제한) ①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부지 및 시설물(분양받은 자로부터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,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지 및 시설물을 포함하며, 이하 “부지등”이라 한다)을 처분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의료연구개발기관에 부지등을 양도하여야 한다.

②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부지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부지등의 양도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

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1. 부지에 대한 양도가격: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

가. 부지의 취득가격

나. 부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 상승률(「한국은행법」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)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

다. 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

2.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: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지등을 양도받으려는 자는 미리 제31조제1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지등의 처분 방법·절차, 제3항에 따른 취득가격·취득일 등 양도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1조의3(경매 등에 의한 부지등의 취득) 경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부지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1조에 따른 입주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1조의4(부지등의 양도명령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입주 승인(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라 입주

승인이 취소된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6개월에서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소유한 부지등을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부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.

제31조의5(이행강제금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양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이내에 그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, 그 기한까지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,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,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,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의4에 따른 양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양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의4에 따른 양도명령을 받은 자가 양도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,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.

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제34조제1호 중 “제31조제1항”을 “제31조제1항(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31조의2제1항 및 제3항(제31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부지등을 양도한 자

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6조(과태료) ①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지등을 양도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① ·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첨단의료복합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령을 적용한다.</u>
<u><신설></u>	<u>제3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발전과 첨단의료복합단지(제5조제1항에 따른 단지등을 포함한다)간의 연계·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u>
제5조(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(이하	제5조(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

<신 설>

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지 선정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입지 선정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1조의2(부지등의 처분 제한)

①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부지 및 시설물(분양받은 자로부터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,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지 및 시설물을 포함하며, 이하 “부지등”이라 한다)을 처분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

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의
료연구개발기관에 부지등을 양
도하여야 한다.

②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
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
부지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
라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
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부지등의 양
도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
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1. 부지에 대한 양도가격: 다음
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

가. 부지의 취득가격

나. 부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
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
간 중의 생산자물가 상승
률(「한국은행법」 제86조
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
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
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
을 말한다)을 곱하여 계산
한 금액

다. 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
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<신 설>

<신 설>

비용

2.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: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지등을 양도받으려는 자는 미리 제31조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지등의 처분 방법·절차, 제3항에 따른 취득가격·취득일 등 양도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1조의3(경매 등에 의한 부지등의 취득) 경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부지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1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1조의4(부지등의 양도명령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입주 승인(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에 따라 입주 승인을

<신 설>

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31
조제3항에 따라 입주 승인이
취소된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
에 대하여 6개월에서 1년의 범
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소유
한 부지등을 양도할 것을 명할
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부지등을 양
도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2제3
항을 준용한다.

제31조의5(이행강제금) ① 보건복
지부장관은 제31조의4제1항에
따라 양도명령을 받은 후 정당
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이내에
그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
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
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,
그 기한까지 양도명령을 이행
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
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
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
로 부과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
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
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

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
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
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
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,
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, 이행강
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,
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
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
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의
4에 따른 양도명령을 한 날을
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양
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
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
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의
4에 따른 양도명령을 받은 자
가 양도명령을 이행한 경우에
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
를 중지하되, 이미 부과된 이행
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.

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
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
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
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

<p>제3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1.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고 입주 승인 사항을 변경한 자</p> <p>2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<u>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</u></p> <p>제34조(벌칙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제31조제1항(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-----</p> <p>-----</p> <p>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제31조의2제1항 및 제3항(제31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부지등을 양도한 자</p> <p>제36조(과태료) ①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지등을 양도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</p>
---	--